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DOI: http://dx.doi.org/10.31008/MV.45.9

일반 논문

‘청산’과 ‘탈출’의 기로에서

경산코발트광산 과거사 청산 담론의 변동과 의미 분석

노용석 _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논문요약

한국 근현대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경산코발트광산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경산코발트광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역사와 해방 후 근대 국민국가 수립에서의 갈등이 특화되어 있어서, 한국의 주요한 사회문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발트광산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일본의 ‘조선반도’ 수탈과 강제 징용의 역사를 투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광산은 1950년 많은 민간인들이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학살된 장소로서, 한국 현대사의 과거사청산기에 유해 발굴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목을 받은 곳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현대사 시기별로 각각 변해온 경산코발트광산에 대한 담론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담론들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담론 역사의 분석 결과를 통해, 현재 경산코발트광산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한국 과거사 청산의 올바른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 **주요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경산코발트광산, 과거사 청산, 국가폭력, 반공주의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2021년은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은 단순히 과거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한국전쟁과 관련한 유적과 기억들은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것이 발전하여 사회의 거대한 상징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전쟁기의 주요한 사건과 기억들을 추적하여, 이것들이 시대를 경과하면서 어떠한 양상으로 정체성이 변화하였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 구조를 인식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한국전쟁기 주요한 민간인 학살지였던 경산코발트광산이 1950년부터 2021년까지 약 71년 동안 어떠한 담론의 생산과 변화를 겪어왔고, 또한 다양한 담론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에트노그라피(ethnography)라 할 수 있다.

한국근현대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경산코발트광산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경산코발트광산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역사와 해방 후 근대 국민국가 수립에서의 갈등이 특화되어 있어서, 한국의 주요한 사회문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코발트광산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일본의 '조선반도' 수탈과 강제징용의 역사를 투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 광산은 1950년 많은 민간인들이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학살된 장소로서, 한국 현대사의 과거사 청산기에 유해 발굴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목을 받은 곳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이렇듯 한국근현대사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폐광으로 머물러 있던 코발트광산은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해 나갔으며, 그것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지배 이데올로기와 연관성을 가진 것들이었다. 식민주의로 대표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정체성은 한국전쟁기에 민간인 학살과 연관되어 좀 더 내재적 이데올로기 갈등과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4·19혁명부터 2000년 초반에 이르기까지 '반공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해 코발트광산에 대한 기억은 철저히 억압된 '공공의 비밀(Public Secret)'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2000년대 초기 이후부터 본격화 된 한국의 과거사 청산 열기는 코발트광산의 '억압된 기억'을 수면 위로 부상하게 하였고, 이 과정은 과거사 청산 정국하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에 억압되어 있던 민중의 기억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화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즉 민중의 비공식적 기억이 어떠한 형식으로 사회의 공적 담론으로 안착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2021년 현재 코발트광산의 외부 광경은 경산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광산 입구 및 주변 환경이 예전보다 깔끔한 형태로 변화되어 있지만, 반면에 광산 내부의 모습은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유해 발굴 현장이 12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며,[1] 유해가 상당수 남아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수직갱도 하부에는 2미터가 넘는 깊이의 지하수가 들어차 있다.[2]

1) 경산코발트광산의 마지막 유해 발굴은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2021년까지 코발트광산 갱도 내부에서 공식적인 발굴은 진행되지 않았다.

2)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발굴된 유해 개체수는 370구이다(노용석 2018, 205-206).

이렇듯 내부와 외부의 모습이 정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듯이, 코발트광산과 관련한 과거사 청산의 모습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경산코발트광산 유족들은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 이후 국가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것은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더불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승리의 이면'에는 어떠한 과정들이 숨겨져 있을까? 진정 배상 판결에서 승리한 피학살자 유족들은 그토록 자신들을 괴롭혔던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 또한 이 과정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과거사 청산의 핵심 목표와 일치하는 것일까? 이 논문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의 기본 질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며, 이 영역은 비단 경산코발트광산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 한국 과거사 청산의 측면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현대사 시기별로 변동해 온 경산코발트광산에 대한 담론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담론들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재구성된 경산코발트광산의 담론을 분석하면서, 현재 경산코발트광산 담론의 변동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 과거사 청산의 방향성'은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한국 과거사 청산의 근본적 의도와 비교해 볼 때 어떤 상이성을 가지는 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2. 연구 과정과 문제 제기

현재까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연구와 관련한 결과물은 상당수 있으며, 한 지역의 민간인 학살지를 배경으로 이에 대한 담론의 역사를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박찬승 2010; 윤택림 2003 등). 이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전쟁의 관점을 거시적 수준에서 마을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된 관점 속에서 민중들의 인식 속에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비슷한 주제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권헌익(Kown 2006)은 베트남 중부지역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 베트남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에 대한 담론이 전쟁 후 사회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해석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과거사 청산과 민간인 학살 관련으로는 라틴아메리카 사례들이 상당히 연구되었는데, 특히 그란딘(Grandin 2004)의 연구가 본 논문의 의도와 유사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란딘은 19세기 후반부터의 과테말라 역사를 기술하면서, 과테말라에서 역사적으로 마야 원주민 학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학살에 대한 담론이 '과테말라 내전'을 겪으면서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의 조사는 위 선행 연구들의 영향을 받아 한 지역에서 상당한 시간을 거치며 진행되었다. 이 논문은 자료조사와 증언 조사, 현장조사 등을 포함해 약 20년 간 진행되어 온 연구 과정의 일부 결과물을 소개하는 것이다. 필자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경산코발트광산의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유족 및 관계자[3]와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고, 1960년대 당시 담론들을 관찰할 수 있는 각종 기록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필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던 코발트광산의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 사업에 참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이 가지는 상징성과 기억정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조사 및 연구의 결과물들이 일부 사용되었으며, 특히 코발트광산을 중심으로 한 이슈에 집중하였다.

이렇듯 경산코발트광산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진행되었지만 이 논문의 주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가지게 된 의문점이었다. 2017년 6월 4일, 경산코발트광산 수직갱도 입구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수직갱도 입구는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 유해 발굴이 실시되었던 곳인데, 발굴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2007년 당시 유해 발굴 팀이 수직갱도를 약 20여 미터 굴착해 놓은 상태였기에, 20대 청년은 이곳으로 추락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한밤중에 수직갱도에 왔으며 추락하게 되었을까? 사건 자체도 독특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청년이 깊은 한밤중에 코발트광산 수직갱도 근처에 오게 된 이유가 '공포를 체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는 소위 '공포 혹은 귀신 체험 사이트'가 존재

3) 여기서 관계자라 함은 경산코발트광산 문제와 연관된 각종 영역의 사람들로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지방정부 관리, 전문 영역의 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하는데, 이곳에서 가장 매력적인 답사 장소로 손꼽히는 곳이 경산코발트광산이다.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산코발트광산은 '대구 경산 안경공장'으로 검색되고 있으며,[4] '곤지암 정신병원', '늘봄가든', '영덕흉가'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괴담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현재, 코발트광산 주변에는 요양병원이 들어서 있는데, 본디 이 건물은 1970년대 건축되었고 한 때 안경공장으로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경산코발트광산 인근에서 1960년대부터 사업을 운영했던 섬유공장과 구두공장 등이 계속해서 망하고 사장까지 자살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선 것이 안경공장이었으나 이 공장의 사장마저도 미쳐서 공장과 기숙사에 불을 질러 22명의 직원이 죽고 사장도 자살하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괴담'은 단지 소문에 불과할 뿐이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떠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은 아니다.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은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사건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졌고, 또한 2016년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배상 판결을 받아 유가족들에게 배상금까지 지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산코발트광산에 대한 담론은 소위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지점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담'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이나 과거사 청산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

4) https://topicis.tistory.com/222(검색일 2021.1).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658(검색일 2021.1) 등. 이 사이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공포 체험 장소로서 경산코발트광산이 선전되고 있다.

기에, 사람이 많이 죽었던 장소라는 이유로 곡해(曲解)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괴담들의 특징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피학살자의 억울한 죽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민간인 학살 서사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괴담이 등장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사원들을 살해한 공장 사장의 광기는 민간인 피학살자 원혼과 연관을 가지는데, 즉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민간인 학살의 '진실'이 '괴담'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고, 괴담은 완전한 허구가 아닌 과거사 청산의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괴담의 존재가 과거사 청산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제 과거사 청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재발 방지'와 '교훈의 사회적 확산'에 있다면,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산코발트광산 사건 조사는 그저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몇몇 사람과 유족들 정도에게만 교훈을 던진 것이고, 전체 사회의 측면에서 기여한 바는 크지 않다. 많은 코발트광산 유족회원들은 괴담의 존재 이유가 젊은 세대와 일반인들의 역사인식 부재에 있다고 말하며, 특히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즉 보수적인 대구경북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코발트광산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들의 죽음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코발트광산의 피학살자들이 무고한 '양민'이었음을 밝히는 홍보가 많이 이루어졌기에 코발트광산의 희생자를 무작정 '빨갱이'로 치부하는 경향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오히려 코발트광산에 대한 괴담이 활성화된 것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보다 구조적인 문제, 즉 코발트광산의 과거사 청산 서사 구조가 '사회적'으로 승화되지 못한 점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문을 작성하고 있다.

3. 역사의 시작: 일제강점기 경산코발트광산

코발트광산은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7년(소화 12년) 6월 26일 '춘길광산'이라는 이름으로 광업허가를 받았고(등록번호 제14403호), '보국(報國)코발트광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등록 당시 주요 광종은 금은으로서 광구면적 38만 평에 대구부 칠성동에 주소를 두고 있던 광업권자 니노미야 다이조(二宮泰三)에 의해 등록되었다. 당시 니노미야는 '안심광산'(등록번호 제20770호)이라는 곳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1941년 이곳에서 코발트광맥이 발견되었으며, 1942년부터 6,073톤의 코발트를 채굴하는 등 1944년까지 광산을 운영하였다. 채굴된 코발트는 태평양전쟁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를 운송하기 위해 1943년 경산시 상방동에 선광 제련시설[5]이 만들어지고 광산 현장에서부

5) 선광장이란 채굴된 원석에서 광물을 선별해 내는 곳을 말하며, 경산코발트광산에서 채굴된 코발트 원석은 상방동 선광장으로 보내져 이곳에서 코발트로 제련되어 경산역까지 운반되었다. 현재까지 코발트광산 선광장은 경산시 상방동 118-2번지 일대에 남아 있으며, 약 1만여m2의 면적에 수십 개의 콘크리트 수조들로 구성되어 있다(경산신문 2014/08/11). 경산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곳 선광장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터 경산역까지 삭도(索道)가 건설되기도 하였다. 경산코발트광산에 대한 언급은 일본 학술지 등에서 간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1942년 나카무라 게이사부로가 쓴 "조선코발트광상조사보고개설"이 있다. 이 글은 일본지질학회가 펴낸『지질학잡지』49권 585호에 실려 있는데, 당시 조선에 모두 15개의 코발트광산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경산코발트광산의 코발트 품위가 최고 2~3%, 드물게는 6%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경산신문/2015/2/2). 또한 1943년 와타나베 만지로[6]의 "경상북도보국코발트광상에 대해서"라는 글에 의하면, 평산동 코발트광산은 일본에서 개발이 가장 먼저 진행된 광산으로서, 코발트 제련을 위한 채광, 선광, 용광 시설이 거의 완성돼 가까운 시일 내에 조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두 글들을 요약해 보면, 경산코발트광산은 1937년 금은 광산으로 출발해 1942년 코발트광맥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채광 선광 제련시설을 갖추어서 1943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조선의 대표적인 코발트광산이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광산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복잡하지 않다. 현재 외부에 드러나 있는 광산 입구는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직갱도 1개(깊이 58미터)와 2개의 수평갱도로 이루어져 있다. 2개의 수평갱도는 각기 제1수평갱도와 제2수평갱도로 불리어지는데, 각각 수직

6) 와타나베 만지로의 글은『지질학잡지』51권 604호(일본지질학회 창립 50주년 학술대회 기념논문)에 실려 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코발트광산의 자료는 경산신문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밝힌다(경산신문 2015/02/02; 2016/08/08 등). 경산신문의 경산코발트광산 관련 보도는 최승호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는 1990년대 중반부터 경산코발트광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갱도의 26미터 지점과 58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갱도의 기능은 노동자들이 작업을 위해 드나드는 입출구의 역할을 하였고, 수직갱도는 내부에서 채굴한 코발트 등의 광물을 상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였다. 경산코발트광산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인근 주민들의 증언과 소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외형상 드러난 현재 구조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보다 넓은 형태의 구조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아버지가 코발트광산에서 작업 도중 숨졌다는 김상조[7](82세)의 증언에 의하면, 코발트광산에는 모두 3개(현재 제1수평갱도를 제외)의 수평갱도가 있었는데, 높이에 따라 '이찌고'(현재 제2수평갱도), '니고', '산고'라 불렀으며, 현재 '니고'와 '산고'는 코발트광산 인근에 개발된 골프장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8]

이렇듯 규모가 크다 보니 경산코발트광산에는 상당히 많은 노동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들 중 다수의 인력들은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 노무자들이었다. 당시 노무자들은 경산시 평산 2동 근처 약 300세대가 넘는 광산사택에 기거하면서 노동을 하였고, 경상북도 인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집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발트광산 강제징용 노무자들의 생

7) 2020년 현재 경산시 평산동에 거주하고 있다.

8) 코발트광산 인근 골프장 개발은 2005년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골프장 공사 중 한국전쟁 민간인피학살자 유해 40여 구와 수평갱도 1개가 발견되었다(노용석 2005 참조). 필자는 당시 발굴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였는데, 골프장 공사 중 발견된 수갱갱도가 '니고'와 '산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활사와 관련한 자료는 수집된 것이 없다. 하지만 이들 노동의 힘겨웠던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강제징용자 집단묘지이다. 앞서 언급했던 김상조의 아버지 김용득(1910년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코발트광산에서 운반 작업조로 일을 하다 다이너마이트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 사망 이후 김용득은 '갈못 안 공동묘지'(현재 경산시 평산동 산 23번지)에 안장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 민묘라는 것이다(경산신문 2015/2/2). 현재 이곳에는 약 100여 기의 무연고 묘지들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이 묘들이 코발트광산 노무자들의 무덤이라는 것을 최근 알게 되었다.

경산코발트광산의 일제강점기 기억은 2000년 이전까지 상방동 선광장과 광산사택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억에서만 회자되었을 뿐 대중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았다. 코발트광산은 그 규모로 볼 때 상당히 거대하였기에 많은 일화와 담론들이 있을 것이라 예측되지만, 이에 대한 기억의 재생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큰 규모의 강제징용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기억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많은 수의 광산 노동자가 외부인이었으며, 1944년 폐광 이후 이와 관련된 시설들의 기능이 빠르게 사라졌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새롭게 표출된 것은 다른 시기 기억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했으며, 그것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기억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4.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과 공공의 비밀

1)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의 발생

경산코발트광산은 1944년 폐광이 되었고, 이로써 강제징용과 관련한 역사는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혔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광산은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이 바로 그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경산코발트광산은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주요 가해자는 이승만 정권하에 있던 대한민국 경찰과 군인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떠도는 소문이나 추측으로만 확인되다, 2005년부터 실시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는바,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사건의 개요만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발생한 이후 비교전 지역이었던 경상북도 경산에서는 경산, 청도, 대구, 영동 등지에서 끌려온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들과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상당수가 1950년 7월~8월 경 코발트광산 등지에서 집단 학살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신문」은 1960년 6월 7일 자 보도에서, 1950년 7월 당시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이다 군경에 신병이 인계된 1402명의 수형인 명단을 보도하였다. 보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군경들이 형무관으로부터 인계받아 간 그들이 현재 생존하여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대구 근교에서 집단 총살된 것으로 알려지고, 그들이 형무관의 손으로부터 군경의 손으로 인계된 날짜가 그들의 '제삿날'이 될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이들이 모두 총살되었다면, 이들은 사형언도 없는 사형집행을 받은 것인데, 그들 중에는 왕래 방해죄니 공무집행방해죄니 도주죄로 미결수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매일신문 1960/6/7).

위 보도에서는 수형인 1402명 대부분이 대구 근교에서 학살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 및 피학살자 유족단체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경산코발트광산에서 학살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학살자들의 죽음에 이르는 경위는 대개 예비검속 후 집단구금과 행방불명으로 이어진다. 경산코발트광산에서의 학살에 대해 경산시 남방동의 지역 주민이었던 정영호는 1950년 7월 20일경부터 매일 트럭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약 1시간 간격으로 올라왔으며, 트럭이 광산으로 올라간 이후 총소리가 났다고 한다. 이러한 패턴은 1950년 9월(20일)까지 계속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노용석 2005, 172).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사건의 주요 가해 집단이 경산과 청도경찰서, 경북지구 CIC 경산 청도 파견대, 국군 제22헌병대이며, 이들은 내무부 치안국 - 경북지방경찰국 -각 경찰서, 육군본부와 경남북지구 계엄사령부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 속에서 가해 행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진실화해위원회 2010, 775-776).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코발트광산에서 사망한 희생자의 수가 1,800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진실화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위원회 2010, 775), 유족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약 3,500여 명이 이곳에서 학살되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자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주요 문서로는 경산경찰서와 청도경찰서의 「처형자가족명부」 및 「보도연맹원명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대공바인다」[9]와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신원기록편람」, 「보호관찰대상자 관리부」 등이 있다(진실화해위원회 2010, 789).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125명의 사건 신청인 진술과 전직 경찰 및 헌병, 형무관 등의 참고인 조사, 유해 발굴[10]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침묵과 공공의 비밀

경산코발트광산에서 잔혹한 학살이 발생하였으나 곧바로 이를 공론화

9) 청도 경찰서의 「대공바인다」는 1972년 작성되었으며, 「보도연맹원명부」와 「처형자가족명부」로 각각 구성되어 , 당시 총 2,138명의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생존 유무를 비롯해 개인신상기록 및 현재 동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처형자가족명부」에서는 한국전쟁 전후를 망라하여 총 531명의 처형자에 대한 개인 신상기록과 가족관계, 처형 전 활동 사항 등이 나열되어 있으며, 여기에 경산코발트광산이 처형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경산경찰서의 기록은 1975년 작성되었다(진실화해위원회 2010, 789). 또 다른 문서인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는 1979년 청도경찰서 기록과 1977년 경산경찰서 기록이 이용되었고, 「신원기록편람」은 1982년 청도경찰서 기록과 1981년 경산경찰서 기록이 사용되었다. 「보호관찰대상자 관리부」는 1970년 영동경찰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경산코발트광산에서 대구경북지역 이외 충북 영동지역의 민간인들 또한 학살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진실화해위원회 2010, 789).

10) 경산코발트광산 유해 발굴은 2001년부터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본격화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진실화해위원회)가 주도한 것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실시되었다.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다수 민중과 피학살자 유족들은 학살의 진상 규명은 고사하고 불법적 처형과 죽음을 발설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하지만 4·19혁명은 이러한 상황에 반전을 가져왔다. 제4대 국회는 4·19혁명 이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자, 1960년 5월, 3개 지역(경남, 경북, 전남)의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6월 10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경상북도에 대한 조사는 주로 대구시 일원(상원동, 파동, 가창댐, 대구형무소)과 문경(산북면 석봉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의 여파는 경산지역까지 파급되었다. 당시 매일신문 기자였던 강창덕[11]은 국회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경산코발트광산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12] 기사의 내용은 코발트광산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 있는 유해들을 취재한 것이었다.[13] 또한 그는 코발트광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하여, 학살 당시 헌병들이 동승한 트럭에 피학살자들이 타고 있었고, 피학살자들은 광산의 수직갱도에서 처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진실화해위원회 2008, 13-15).

이후 강창덕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1960년 5월 30일에 '경산군하 피

11) 강창덕은 1928년 경산시 하양읍에서 출생하여 영남일보와 매일신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1960년 5월 매일신문사를 사직한 후 '경산군하피학살자 및 피해자 실태조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유신반대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10년 간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다. 강창덕은 이 논문을 작성 중이던 2021년 9월 3일 작고하였다.

12) 당시 최초로 작성한 기사는 "아직도 첩첩히 쌓인 백골, 학살은 대구 근교서도, 총소리 매일 산골 울려, 압량 코발트 폐갱 속에 추산 1천여 해골"(매일신문 1960/05/22)이다.

13) 당시 기사에는 코발트광산이 인근 주민들에게 "해골광산"으로 불리고 있으며, 폐광 인근에 상당히 많은 유해들이 드러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매일신문 1960/05/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학살자 및 피해자실태조사회(이하 경산피해자실태조사회)'를 구성하고[14], 경상북도 국회조사반에게 경산코발트광산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국회조사단은 시간상의 이유 등을 핑계로 대구 가창골 및 문경지역 조사만을 실시한 채 서울로 올라갔으나, 이미 기초조사를 완료했기에 5대 국회로 과업을 넘겨 계속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매일신문 1960/6/7).

이렇듯 당시 분위기는 경산코발트광산과 민간인 학살 대한 추가 조사가 곧이어 이어질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진 이는 거의 없었다. 위와 같은 시대적 정서를 반영하듯 곳곳에서 울분을 참지 못한 유족들의 '복수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1960년 6월 6일, 경산 안심면 피학살자 유족 30명(부녀자 23명, 남자 7명)이 한국전쟁 당시 민보단 부단장이었던 김만석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재도구 등 약 20여만 환 어치의 재산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매일신문 1960/06/08). 이 일로 피학살자 유족 5명이 재물손괴 피의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4·19혁명 이후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나던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요구의 한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이후 경상북도 차원에서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신고가 진행되었고, 경산지역에서도 56명이 진상 규명 신고를 하였다(매일신문 1960/6/23).[15]

14) 경산피해자실태조사회의 회장은 강창덕이 맡았으며, 정종소, 조희식, 임병일, 김상길, 장용운 등이 발기인에 참여하였다(매일신문/1960/5/30).

15) 당시 신문에 게재된 지역별 신고인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산 56명, 김천 99명, 달성 166명, 군위 104명, 영천 383명, 고창 197명, 청도 301명, 금릉 37명, 영양 25명, 청송 13명, 포항 68명, 문경 606명, 봉화 148명, 대구 272명. 경산의 경우 최종 354명의 유족 신고를 받아 4대 국회 양민학살 특위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뜨거워진 진상 규명 열기처럼, 일반 대중들의 코발트광산에 대한 담론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쟁기 이후부터 주민들에게 코발트광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금기가 4·19혁명으로 누그러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강창덕은 1960년 5월 22일 최초 보도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 부락사람들(코발트광산 인근 평산동 주민)에게 그 당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려 하여도 서로 눈치만 살피고 말하기를 꺼렸으며 현장까지 같이 가서 안내를 청하여도 겁난다고 말하고 기자가 혼자 찾아가도록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채로웠다. (중략) 마을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만 말하고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 한 청년은 "아이고 말 다 못합니다"라고 하고 군인들이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충청도 말과 이북 말을 하는 이가 많았다고 말하였다. (중략) 이곳 주민들은 "자세히 말하려면 때가 와야 한다"고 알아채릴 수 없는 함축성으로 무엇을 두려워만 하는 눈치였다(매일신문 1960/5/22).

위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4·19혁명과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의 요구가 거세어졌다고 하지만 일반 대중들의 인식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발설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코발트광산에 대한 기억은 비밀스럽고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피학살자 유족들 역시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 4·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혁명 이후 경산피해자실태조사회나 경북유족회 등의 단체는 유족 신고를 받고 위령제를 지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많은 피학살자 유족들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기억을 영원히 침묵 속에 두고자 하였다. 아래 기사 내용은 1960년 당시 어느 피학살자 미망인이 어떠한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족들 가운데서 삯바느질로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S여사는 "이젠 남은 일이라곤 어린 자식들을 기르는 일인데 감수성 빠른 자식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싶지 않으며 아문 상처를 뒤치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면서 당시의 이야기를 되풀이하기를 싫어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한국전쟁 시기 가족이 학살당한 사람들 _필자주) 이미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고 거짓말을 하던 S여사는 겨우 유족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당시 사회에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사회란 항상 변동하는 것으로 그 당시의 사정에 따라 정의가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불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조리지웠다. S여사는 "자꾸만 물으면 입장이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밖으로 놀러가라고 내보낸 후 "저 애들에게 그의 아버지가 외국에 가 있다고 말하였고 그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도 그들에게 구김없는 생활을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장하여 때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죠. 이러니 애들의 이름이나 연령이나 일체 묻지 말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이젠 누구도 원망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 모자의 생활에 간섭만 않으면 가장 좋은 세상이랄 수 있지요!"라고 말하는 S여사의 눈에 맺힌 이슬은 평생토록 못잊을 이 부조리

의 비극을 억지로 조리지워야 했던 체념이 체념으로 처리되지 못한 미련이었는지도 모른다(매일신문 1960/5/23).

메스켈(Meskell 2006, 161-162)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사례를 인용하여 트라우마 문화(Trauma Culture)와 그 생산물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트라우마는 상당수의 유족 및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좌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4·19라는 짧은 시간의 변화가 민간인 학살의 상징성을 바꿀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입장은 많은 이들이 그들의 기억을 공적 담론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채 가슴속에 담아두는 이유였다.

그리고 1961년, 대다수의 유족들이 인식한 바와 같이 4·19혁명 시기의 변혁성은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바로 5·16군사쿠데타의 발생이 그것이었다. 군사쿠데타 이후 전국의 주요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경산군의 경우 유족회 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강창덕이 경찰의 체포를 피해 도망을 다녀야 했다.[16] 민간인 학살에 대한 담론 역시 사회 전역에 걸쳐 누구나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절대 입 밖으로 발설할 수 없는 '공공의 비밀(Public secret)' 영역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산코발트광산에 대한 담론도

16) 강창덕은 1961년 당시 체포되지 않았으나, 1972년 유신반대 운동으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8년 8개월 복역 후 1982년 12월 출소하였다(진실화해위원회 2008, 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5. 경산코발트광산 담론의 다변화

5·16군사쿠데타 이후 형성된 경산코발트광산에 관한 '공공의 비밀'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 봉인이 본격적으로 풀리게 되며, 이 시기부터의 담론은 한국 사회의 구조변화와 맞물려 보다 세부적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경산코발트광산과 관련한 담론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그 특징과 의미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1999~2005년: 시민사회의 결합과 대항 담론으로서의 성장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곳이지만, 경산코발트광산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발설될 수 없었다. 특히 1961년부터 1999년까지, 가끔씩 '제주 4.3사건'과 '고양 금정굴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17] 등이

17) 고양 금정굴 사건은 1950년 10월 인공시기 북한군 부역 혐의를 받고 있던 민간인 150명 이상이 일제시기 금광이었던 금정굴에서 학살당한 사건이다. 1995년 모 방송국과 고양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금정굴 유해 발굴이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면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한 담론을 활성화하였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국군 제11사단 9연대 군인들이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죄목으로 주민 57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되기도 했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경산코발트광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표면적으로 볼 때, 광산에서 죽은 이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흩어져버린 그 기억들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이도 없었다. 남아 있던 것은 오직 광산 인근 주민 및 피학살자 유족들의 외부로 발설할 수 없는 기억들뿐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1995년부터 경산지역의 일부 지식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역사답사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금씩 코발트광산의 기억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경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위한 답사를 실시하면서 경산코발트광산에 관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극히 제한된 행동이었지만 한두 번 독자적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이후 보다 본격적으로 경산코발트광산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것은 1999년 노근리 학살의 폭로 이후부터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노근리 사건은 1950년 1950년 충북 노근리에서 미국 제1기병사단 예하 부대가 노근리 경부선 철도 위 민간인 300여 명에게 기총소사를 하여 학살한 사건이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의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 중 가장 핵심 범주에 있었던 '미국의 위상'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항상 '자유 수호의 우방'이라고 여기던 미군의 학살이 공론화되는 동안 한국전쟁기의 다양한 민간인 학살들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는 역할을 하였다. 노근리 학살의 여파는 결과적으로 볼 때 지배 이데올로기의 틀에 묶여 있던 각종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의 봉인을 해제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노근리 사건 이후, 경산코발트광산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다. 사실 코발트광산은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학살된 이들의 출신지가 모두 경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범주에는 대구형무소 재소자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8]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경산코발트광산 사례는 상당히 큰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지만, 이곳에서 학살된 이들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유족회를 구성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민간인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 년이 지난 2000년에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산의 대표적 신문사인 「경산신문」은 시민사회단체[19] 관계자들과 함께 2000년 1월부터 '코발트광산 유족 찾기'를 시작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하여 1960년 4·19혁명 이래 2000년도에 다시 경산 유족회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결성된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는 1960년 당시의 유족회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1960년 유족회가 피학살자 유족 스스로 결성한 단체였다면, 2000년 결성된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주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960년 4·19혁명 이후

18) 예를 들어 「대구매일신문」은 1960년 5월 경, 1950년 7월 대구형무소에서 군경에게 인계된 1402명의 재소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군경에 인계된 후 실종되었으므로 피학살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명단에는 대구경북지역 사람들 이외에도 제주 4.3 사건에 연루되었던 제주도민 165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학살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대구 가창골' 혹은 '경산코발트광산'으로 끌려갔다는 '소문'만이 무성할 뿐이었다.

19) 당시 경산의 시민사회단체들로는 '경산민주단체협의회', '경산민주청년회' 등의 단체가 있었다.

진행되었던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은 거의 대부분 피학살자 유족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시민사회 세력이 유족의 영역을 대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1987년 민주화운동 등의 여파로 사회운동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점과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의 연령이 1960년과는 달리 상당히 고령에 이르렀다는 측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듯, 2000년 이후 새롭게 결성된 경산유족회는 경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결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2001년 모 방송국의 시사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여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을 소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광산의 제2수평갱도에 있던 유해들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다.[20] 또한 경산유족회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민간인 학살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결국 2000년 이후 새롭게 결성된 경산유족회는 1960년대 유족회의 '망자(亡者)에 대한 제의(祭儀) 완결과 해원(解冤)'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탈피하여 범사회적 측면으로 활동을 넓혔으며, 가족의 원한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적으로 처형된 민간인 학살의 모순 구조를 해결해야 하고, '양민'의 범주가 아니라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민간인'의 차원에서 학살 사건을 바라봐야 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물론 모든 유족들이 이 사고에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유족회의 '공식적 입장'은 2000년 이후 달라진 코발트광산의 정

20) 이것은 2001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방영된 MBC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도연맹〉 편에서 소개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체성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경산유족회의 변화와는 별도로, 1999년 노근리 사건의 공표이후 경산코발트광산은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코발트광산의 갱도 내부에 피학살자의 유해가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노근리 학살이 밝혀진 이후,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특히 미군의 학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작전권이 유엔군에 있었으므로 총체적인 민간인 학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보는 기운이 조성되었다. 이에 2000년 1월부터 경산지역에서는 '경산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양민학살특위'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제1수평갱도에 존재하는 유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코발트광산을 방문하게 된다. 특히 2000년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군학살만행범민족특별조사위원회(이하 전민특위)'라는 단체에서 개최한 '미군학살만행 진상 규명 및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합동위령제'가 경산코발트광산 제1수평갱도 앞에서 실시되기도 하였다. 이 당시 수백 명의 인원이 위령제에 참가하였고, 참가자들은 단순히 코발트광산의 진상 규명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한국사회를 누르고 있던 '반공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를 외쳤다.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이 유족 개인의 해원 차원을 벗어나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서서히 옮겨간 것이다. 이러한 대항 담론은 분명 경산유족회원들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의해 주도된 측면이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민간인 학살이 국가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구조적 사건이며,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유족들의 의견은 상당히 다른 것이 사실이었다. 유족들은 표면적으로 대항 담론으로서의 코발트광산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종류의 의견이 있었다. 많은 유족들은 대항 담론의 형성이 개별 가족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동의했지만, 가족의 범주를 떠나 '인간의 보편적 인권 확립'이라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완전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유족과 시민사회관계자의 '동상이몽'은 향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역사성과 과거사 청산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엇갈림'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장의 제3절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2) 2006~2010년: 공적 역사로의 진입과 피해자 정체성의 확립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의 타지역 유족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2005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는 즉각 이태준[21] 유족회장을 비롯한 126명의 유족들이 진실화해

21) 이태준 회장은 2011년 3월 작고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위원회에 '진실 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은 민간인 학살이나 인권 침해의 피해자일지라도 본인 혹은 유족이 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22] 이에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을 원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는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특위' 이후 국가에서 행한 최초의 진실 규명 행보였다.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는 '학살'이라는 말의 의도성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이라는 용어대신 '민간인 집단 희생'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처럼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조사는 과거 언론이나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억의 서술'이 아니라 '공식적 역사'가 되기 위한 중요 단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경산코발트광산 유족들은 2006년 3월, 126명이 함께 진실 규명 신청서를 위원회에 접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그들에게 '경산코발트광산사건'이라는 '사건명'이 부여되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들은 2009년까지 3년 동안 유족들과 사건 참고인, 경찰서[23]와 같은 여러 기관의 자료

22) 물론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직권 조사'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 사건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직권조사 범위로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국형무소 재소자 사건' 등이 있다.

23) 주로 경산경찰서와 청도경찰서에 대한 조사가 주를 이루었다(진실화해위원회 2009 참조).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산코발트광산은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유해가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갱도 내부에 방치되어 있던 유해를 발굴하였다. 코발트광산 유해 발굴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실시되었고, 수직갱도와 제1, 2수평갱도에 노출되어 있던 500여 구의 유해가 수습되었다. 특히 유해 발굴 현장설명회 당시, 발굴된 유해를 바라보고 있던 코발트광산 유족들의 모습이 뉴스 등에 방영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의 아픔을 공유했다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조사과정 끝에, 2009년 11월 17일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 규명 결정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진실 규명 결정서에는 국가의 잘못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후 진실 규명 신청 유족 126명에게는 그들의 가족이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되었다는 '국가의 공식 결정문'이 전달되었다. 이것은 과거사 청산의 작은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피학살자는 '빨갱이'의 누명을 벗게 되었고, 유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무고하게 민간인을 살해했던 국가의 잘못에 대해서 떳떳하게 발언할 수 있게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과정은 유족들에게 더 이상 피학살자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가기관에 의한 조사가 실시되면서 그들이 진술한 증언은 국가의 기록이 되었고, 이것은 경산코발트광산 담론이 단순히 대항 담론으로만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위와 같은 '공적 과정'을 겪으면서 2006년부터 경산코발트광산과 관련하여 몇 가지 변화들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의 장소 혹은 처형지로서의 경산코발트광산이 유족들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불러일으키는 일종의 '키워드'가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은 누가 이곳에서 학살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구조이다. 특히 수직갱도에서 대부분 희생되어 아래로 떨어졌기에, 갱도 밑바닥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해는 사람 1개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뒤섞여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DNA)를 통한 신원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유족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지리 혹은 상황적 조건)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가족들이 경산코발트광산에서 희생되었을 것이라 '짐작'했고, 이 '짐작'에 근거해 유족회에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이라는 사건명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고, 이를 통해 2009년 11월 진실 규명결정서까지 받게 된 이후, 유족들은 피학살자의 죽음과 자신들의 희생에 더욱 더 '공식적인' 코발트광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 특징이 '무명용사의 묘'와 같이 특정한 목적의식(민족주의)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앤더슨 2002, 29), 상당수의 유족들은 국가 조사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공동체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고와 기원을 가진 피해자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진실 규명이라는 국가의 공적 영역에 의해 완성되었기에 국가주의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정체성 획득 이외에도 경산코발트광산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민간인 학살의 기억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기억이 서로 융합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경산코발트광산의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담론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사회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조사가 공론화되면서 일제강점기의 역사 또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 시기의 기억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프레임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 불완전한 결론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불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인해 해방이후에도 친일파가 계속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친일파 세력이 주축이 되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었기에, 결국 두 사건은 연관된 기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기억과 담론이 교환하면서 공동 서사와 집단 기억을 만들어내듯이, 경산코발트광산의 공간적 상징성 역시 단순히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이라는 주제를 넘어 강제징용의 기억과 합쳐지면서 '한국 근현대사 전체의 아픔'이라는 상징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경산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의 지하자원 수탈 현장이자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현장이라는 중첩된 의미로 경산코발트광산을 인식코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역사평화공원 만들기 계획'이다. 역사평화공원 만들기 계획은 경산코발트광산 일대와 상방동 선광장을 함께 묶어 역사관과 평화공원 등을 조성하여 한국 근현대사와 인권 평화를 알릴 수 있는 역사 체험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는 식민주의와 전쟁이라는 다른 범주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수난과 슬픔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연대하고 있고, 이러한 두 기억의 결합은 민간인 학살의 기억이 공적 영역으로 접어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다.

3) 2011년 이후: 국가배상과 '빨갱이로부터의 탈출'

2010년 12월 31일, 한국의 포괄적 과거사 청산을 추진하던 진실화해위원회는 약 5년여 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료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약 7,000여 건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진실 규명 하였고,[24] 경산코발트광산 유족 126명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2000년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가 다시 만들어지던 시기, 유족들의 바람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이었다. 자신의 아버지 혹은 형님이 '빨갱이'가 아니라 국가폭력의 억울한 피해자였음을 밝히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는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해 그들의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산코발트광산 유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계속적인 행보를 이어나갔으며, 이것은 과거사 청산의 일반적 행보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요소들이었다. 그것은 바로 국가배상소송이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25]로 인해 과거사 청산

24)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7,196건의 진실 규명을 결정하였다.

25)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설립 당시 4년간의 위원회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고, 이후 필요하다면 국회 등의 동의를 받아 2년간의 추가 운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보수적 성향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거사 청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높아졌고,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 진실화해위원회는 단 6개월 만의 추가 연장을 실시하고

과정에서 중요한 여러 요소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서둘러 활동을 종료하였다. 특히 사건의 진실 규명 이후의 과정, 즉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보상, 사회적 화합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접근조차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 배보상 측면에서 볼 때,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포괄적 배보상법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법률적 성과가 나타나지는 못하였다.[26] 결국 과거사 청산과 연관된 포괄적 특별 배보상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국가폭력의 피해자임을 증명 받았던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과거를 보상받기 위한 방법을 개척하였다. 그것은 개별 유족회 혹은 개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27]

2009년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의 진실 규명을 받았던 유족들 역시 국가의 통합적 특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송을 통한 배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경산코발트광산 유족 109명은 2011년 10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시작하였고, '소멸시효' 등의 여러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

2010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

26)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8월 21일 '포괄적 배보상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대통령과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의 배보상 특별법 권고에는 피해자와 유가족 구제를 위해 국가에 의한 형평성 있고 일관된 기준의 배보상이 필요하며, 유가족의 개별 소송과 개별 입법에 따른 국력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함을 기록하고 있다(진실화해위원회 2010, 211-212).

27)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 규명 신청을 했던 피해자 8,912명 중 5,000여 명 이상이 진실 규명 결정서를 받은 2009년 이후부터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4.9통일평화재단 2017, 10-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하고 2012년 1심 승소(서울중앙지법)와 2014년 2심 승소(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마침내 2016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이 재판에서의 승소는 사법적 측면에서도 경산코발트광산의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한 것이고, 또한 이에 기반하여 개별적 금전 배상[28]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국가배상과 동시에 외형적 측면에서도 변화의 요소는 감지되었다. 2014년부터 경산시는 경산코발트광산 일대를 '역사체험현장 조성사업지역'으로 선정하고, 제2수평갱도 입구 주변을 중심으로 약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주차장과 목교(木橋), 소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제2수평갱도 입구에는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입간판이 들어섰고, 그 건너편에는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된 120명의 이름이 새겨진 위령탑이 들어섰다.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는 매년 7월 혹은 10월에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경산체육관 등의 공공장소를 임대해야 했지만 지금은 코발트광산에 세워진 위령비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에 의한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법원으로부터의 국가배상 판결, 코발트광산 인근의 위령비 건립, 그

28) 국가의 개별 배보상금은 희생자 당사자 8,000만 원, 미망인 4,000만 원, 희생자의 부모와 자녀 800만 원, 희생자의 형제자매 400만 원으로 규정되었다. 이 보상 금액은 경산코발트광산을 비롯한 많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국가 배보상에서 일종의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일부 사건의 경우 배보상액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고등법원은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2억 원을 판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영암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의 다수의 사건에 대해 위자료 1억 원을 판결하기도 하였다(4.9 통일평화재단 2017, 13).

리고 경산시에서 추진 중인 식민지 유산과의 결합을 통한 역사문화유적지 추진 등의 과정을 본다면, 경산코발트광산의 과거사 청산은 일부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순기능적 측면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진전된 외형적 성과와는 달리, 국가배상을 받은 피해 유족들의 담론은 과거사 청산의 로드맵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 4·19혁명 이후 진행되었던 유족회 활동은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 당시 유족들의 주요 목표는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해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빨갱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고, '양민(良民) 학살' 담론이 우세했던 것도 '빨갱이'와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민간인'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양민 학살 담론은 2000년 들어서면서 시민사회가 주도한 새로운 학살 진상 규명 운동에서는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었다. 즉 양민 학살 담론은 전쟁 시 비전투요원인 민간인의 불법적 처형이나 학살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인해 2000년 이후 '양민 학살 담론'은 급격하게 '민간인 학살' 담론으로 옮겨갔으며, 만약 전시 상황에서 비무장상태의 민간인이 국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형되었다면 '이념을 떠나' 모두 민간인 학살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는 흐름이 생겨났다.

시민사회가 이처럼 학살에 있어서 이념적 문제를 떠난 보편적 인권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피학살자 유족들의 인식이 이와 함께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 경산코발트광산의 다수 유족들은 민간인 학살 문제를 보편적 인권 개념으로 연결하지 않거나,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족들의 민간인 학살 진실 규명 운동의 목적은 자신들의 피학살 연고자가 '빨갱이'였다는 '잘못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많은 유족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빨갱이'로부터 '탈출'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빨갱이'라는 지배 이데올로기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많은 유족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빨갱이'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공주의를 더욱 지지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냉전 시기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빨갱이 집단'으로 몰린 이들에게 연대책임이나 집단 보복이 실시되었고, '빨갱이 집단'에 몰린 이들은 이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 정치 캠페인(반공주의)에 더욱 적극 가담하였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권헌익 2013, 54-57).

코발트광산 유족들 역시 이와 같은 시스템에 깊숙이 위치해 있다. 많은 코발트광산 유족들은 자신의 피학살 연고자들이 빨갱이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진실 규명 결정서'와 이에 기초해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통해 과거사 청산의 '사실상' 종료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반공주의의 청산이라는 명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빨갱이로부터 '탈출'한 안도감만 존재한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과거사 청산의 진정한 목표가 민간인 학살의 시급한 정리와 더불어 문제를 발생시킨 핵심 요인을 개정해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이라면, 경산코발트광산 사례는 국가배상에까지 이르렀지만, 민간인 학살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의 치유와 재발 방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이 반공주의를 극복하면서 보

편적 인권 체계의 확립으로 도달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다. 우선 1990년대까지 많은 유족들이 연좌제 등에 의해 극심한 피해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경산코발트광산 유족회 구성원의 대부분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연좌제 피해를 보았으며, 자신의 아버지 혹은 친족이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처형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곧 '빨갱이 집안'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러한 처지에서 보았을 때, 유족들의 진실 규명과 과거사 청산의 목적은 '보편적 인권의 확립'이 아니라 '빨갱이 집안, 빨갱이 자식, 빨갱이 OO...' 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이고, 이에 따라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과거와 유사하게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6. 소결: '탈출'과 '청산'의 기로에서

경산코발트광산 사건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대표적 사건이면서, 국가폭력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회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 규명 이후, 경산코발트광산 유족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많은 유족들은 과거사 청산의 목적이 어느 정도 '종료'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국가배상금과 더불어 과거사 청산의 '막바지' 뉘앙스를 말하고 있지만, 현재 경산코발트광산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은 '괴담'과 어울려 있고, 유족들은 민간인 학살 피해를 당했던 자신의 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족들이 '빨갱이'라는 허울에서 벗어난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작 민간인 학살의 실행과 은폐를 담당했던 '반공주의' 자체의 청산에는 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자 국가배상에까지 이른 경산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사건은 참혹한 과거를 청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사 청산의 주요 목표였던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폭로와 재발 방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단지 빨갱이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또한 국가배상 이후 코발트광산 유족들의 활동은 이전보다 더욱 국가주의적 틀에서 진행되었고, 일부의 경우에서는 반공주의가 이전보다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목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향후 올바른 방향의 과거사 청산 로드맵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 사항을 요구하게 된다. 경산코발트광산의 경우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국가배상 등이 이루어지면서 다소의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이것 역시 과거사 전체에 대한 배상이기보다 개별적 보상의 성격이 강한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청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경산코발트광산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의 '특별배보상' 형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음으로써, 이 문제가 국가와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아닌 '사고 해당자'에 제한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의 목표는 '청산'의 문제이지 '탈출'의 문제가 아니다. 만약 이 시점 '탈출'에 방점을 둔다면, 우리는 향후 더 큰

비극과 청산 대상을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글은 '청산'과 '탈출'의 기로에서 어느 방향으로의 이동이 중요한지를 지적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참고문헌

〈저서 및 논문〉

4.9통일평화재단. 2017.『한국전쟁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국가배상소송 현황』.

권헌익. 2013.『또 하나의 냉전』. 이한중 역. 민음사.

노용석. 2005. "민간인학살을 통해 본 지역민의 국가인식과 국가권력의 형성: 경상북도 청도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8.『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산지니.

박찬승. 2010.『마을로 간 한국전쟁: 한국전쟁기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전쟁들』. 돌베개.

앤더슨, 베네딕트. 2002.『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윤형숙 역. 나남.

윤택림. 2003.『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진실화해위원회. 2008.『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2007년 유해발굴 보고서 제3권: 인문사회조사(下)』. 충북대학교 박물관.

_____. 2009.「경산코발트광산 등지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및 불능 결정서」.

_____. 2010.『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I : 위원회의 연혁과 활동 종합권고』.

Grandin, Greg. 2004. *The Last Colonial Massac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Kown, Heonik. 2006. *After Massacre: Commemoration and Consolation in Ha My and My Lai*.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skell, Lynn. 2006. "Trauma Culture -Remembering and Forgetting in the New South Africa-. Memory." *Trauma and World 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pp. 157-175.

〈자료〉

경산신문

매일신문

Abstract

At the Crossroads of 'Liquidation' and 'Escape'

Analysis of the Evolution and Meaning of the Discourse on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Noh, Yongseo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Gyeongsan cobalt mine is a meaningful case to examine in analyzing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 as its history symbolically represents the country's major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cluding the country's histor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nation-state after liberation. In particular, the Gyeongsan cobalt mine is an embodiment of the exploitation and forced labor that occurred on the Joseo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mine was also the site of a massive civilian massacre by the Korean military and police in 1950, which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when the bodies of the victims were exhumed as a part of the efforts to purge the past. This study historically reconstructs the changes in the discourses surrounding the Gyeongsan cobalt mine in the course of South Korea's modern history to explain the historical background from which such discourses were born. Through this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what the case of the Gyeongsan cobalt mine suggests as the proper direction for clearing up South Korea's past.

■ **Keywords:** Civilian massacres, Korean war, Gyeongsan cobalt mine, Transitional justice, State violence, Red complex

투고: 2021.9.17. 심사: 2021.10.13. 확정: 2021.11.2.